

01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지방자치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을 강조한다.
- ②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받아들인다.
- ③ 단체자치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.
- ④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,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.

해설

- ③ (X) 주민자치가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고, 단체자치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구분합니다.

정답 ③

02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지방정부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업무에 대한 행정책임이 명확하다.
- ②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정부 간 보고체계에 따른 행정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.
- ③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.
- ④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의사소통 내용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.

해설

- ① (O) 단층제는 주민의 생활행정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져 행정 책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② (O) 단층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
- ③ (X) 중층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기능 및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.
- ④ (O) 중층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의사소통이 길어져 정보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.

정답 ③

03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된 것이 아닌 것은?

- ①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-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- ③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- ④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

해설

- ④ (X)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은 국가 사무입니다.

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- 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-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제15조(국가사무의 처리 제한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- 3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

정답 ④

04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정하는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발의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해설

- ①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 제2항
- ②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2항
- ③ (X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(조례 X).
- ④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제1항 및 제2항

「지방자치법」
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 ③

05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「지방자치법」과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상 지방의회의원이 퇴직하거나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의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 변경된 때
- ②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
- ③ 주민소환투표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 때
- ④ 농업협동조합,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 취임할 때

해설

- ① (X)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하지만,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③ (O)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
「지방자치법」

제43조(겸직 등 금지)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(職)을 겸할 수 없다.

6.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연연초생산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(이들 조합·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 다)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·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

제90조(의원의 퇴직)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.

- 1.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
- 2.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(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)
- 3.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

제23조(주민소환투표의 효력) 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.

정답 ①

06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선결처분은 선결처분을 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

해설

- ①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120조
- ②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121조
- ③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122조
- ④ (X)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(선결처분을 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 X).

「지방자치법」

제120조(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21조(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2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(先決處分)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

정답 ④

07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자치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딜런의 룰(Dillon's Rule)에 따르면, 지방정부는 미국 주(州) 정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과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영국에서 등장한 월권금지의 원칙(ultra vires doctrine)에 따르면,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지방정부가 행하는 어떠한 활동도 존중되어야 한다.
- ③ 보충성(subsidiarity)의 원리는 사무배분에 있어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무는 상위 지방정부나 국가가 단계적으로 보충할 것을 강조한다.
- ④ 미국의 홈-룰(Home-Rule)은 주(州)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현장을 만들고 현장에 규정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해설

- ① (O) 딜런의 규칙에 따르면, 지방정부는 주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② (X) 월권금지의 원칙이란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기능이 중앙정부의 위임범위(법에서 인정된 권한)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.
- ④ (O)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에서 주정부 자치권을 인정한 근거에 따라서 미국 50개 주헌법은 각 주정부마다 독자적인 지방정부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미국 지방정부의 법적 근거는 주정부 헌법과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며, 이것이 다시 지방정부 홈룰체제에 의해서 지방정부헌법(City Charter)에 근거한 지방정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

정답 ②



10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충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해설

- ①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제3항
- ② (X)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(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).
- ③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제4항
- ④ (O)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 제2항

「지방자치법」

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충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

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답 ②

11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농어촌특별세
- ② 담배소비세
- ③ 지방소득세
- ④ 자동차세

해설

농어촌특별세는 국세입니다.

정답 ①

12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「지방재정법」상 정부 회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과는 별개로 회계·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약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- ③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④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해설

- ① (O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2항
- ② (X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약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(기금운용계획과는 별개로 X).
- ③ (O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3항
- ④ (O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4항

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약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약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약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정답 ②

13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눌 때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.

해설

- ① (X)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. 다만,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②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5조 제1항
- ③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 제3항
- ④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제2항

「지방자치법」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(이하 "경계변경"이라 한다)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「주민투표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(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)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(行政面)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제8조(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·설치·분리·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)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.

정답 ①

14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「지방자치법」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·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며,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.
-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며, 그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.

해설

- ①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199조 제4항
- ②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205조
- ③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206조
- ④ (X) 시·도지사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「지방자치법」

제199조(설치)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·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05조(집행기관의 조직 등)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.

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.

제206조(경비의 부담)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,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209조(해산)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.

정답 ④

15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·도는 5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.
- ③ 주민은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·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.

해설

- ① (X) 시·도는 500명이 아닌 300명입니다(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 제항).
- ② (X) 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습니다(「주민투표법」 제7조).
- ③ (X) 주무부장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④ (O)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「지방자치법」

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18세 이상의 주민"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진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22조(주민소송)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,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,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·입차·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·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 
1.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(제21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)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

「주민투표법」

제7조(주민투표의 대상)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.  
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  
3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
가. 예산 편성·의결 및 집행  
나. 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.  
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
정답 ④

16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중앙집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지배적·강압적 관계가 아니라 지도적·협동적 관계로 설정한다.
- ② 신지방분권은 절대적·소극적 분권이 아닌 상대적·적극적 분권의 특징을 지닌다.
- ③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는 신지방분권화를 촉진했다.
- ④ 미국의 신연방주의(New Federalism)와 프랑스의 「코뮌(Commune), 데파르트망(Departement) 및 레지옹(Region)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법」은 신중앙집권의 대표적 사례이다.

해설

- ① (O) 신중앙집권화는 군주국가시대에서와 같은 권력적 집권이 아니라 기술적·지식적·협동적 집권을 의미합니다.
- ② (O) 신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국가통치기구의 일환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면서 상호협력하여 행정을 처리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.
- ③ (O)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는 신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- ④ (X) 프랑스의 경우 1982년 '시·읍·면, 도 및 레종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'의 제정을 필두로 대대적인 지방행정개혁이 단행되었고, 이는 지방분권화의 경향입니다. 미국의 경우 1980년에 집권한 레이건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는 신연방주의 정책기조를 채택하였습니다.

정답 ④

## 17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**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**

- ① 지역 간 균형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.
-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된다.
- ④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을 둔다.

**해설**

- ① (X) 지역 간 균형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(행정협의조정위원회 X).

「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 
제2조(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) 중앙지방협력회의(이하 "협력회의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 
3.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
4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

- ② (X)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.

「지방자치법」  
제187조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·조정)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,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.  
3.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

- ③ (O) 「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「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 
제3조(구성 및 운영)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, 국무총리,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법제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- ④ (X)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 아닌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원단을 둔다.

「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 
제12조(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) 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(제2항에 따른 지방 안전의 발굴·조정 지원은 제외한다)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(이하 "중앙지원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
**정답** ③

## 18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**정부 간 관계에 관한 엘코크(Elcock) 또는 로즈(Rhodes)의 대리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**

- ㄱ.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.
- ㄴ.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.
- ㄷ. 주요 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.
- ㄹ. 주요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해 발의되고 결정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
**해설**

엘코크(Elcock) 또는 로즈(Rhodes)의 대리인 모형에서 지방은 중앙의 단순한 대리자라고 봅니다.

ㄱ.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, ㄹ. 주요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해 발의되고 결정된다는 설명과 관련이 있습니다.

**정답** ②

19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·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·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·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·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해설

- ① (X)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결사항에 포함됩니다.
- ②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193조
- ③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194조
- ④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195조

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제193조(지방자치단체의 역할)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·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·협력, 통상·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, 민간기관, 국제기구(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·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,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,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94조(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)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·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195조(해외사무소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·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정답 ①

20

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론
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.
- ②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, 위치, 관할구역, 하부조직, 공무원의 정원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정부조직법」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,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해설

- ① (O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제2항
- ② (O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
- ③ (O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- ④ (X)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습니다.
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) 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2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제23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

제31조(직제)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, 위치, 관할구역, 하부조직, 공무원의 정원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)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,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정답 ④